
대한민국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
최종자체평가 보고서(안)

- 2016 ~ 2018 -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서론	1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2
III. IRM 권고 사항	6
IV.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9
V. 결론 및 향후 계획	37
참고 : 공약별 상세 현황	39

I 서론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회원국들이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등 열린 정부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 및 데이터의 적극적 공개와 개방 확대, 부패방지 제도의 강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전달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마련된 제3차 국가실행계획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를 공식 이행 기간으로 한다. 이 제3차 국가실행계획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데이터 개방 등 기존 국가실행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한편 기술 및 혁신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접근성 개선, 공직윤리 확립, 재정투명성 제고 등 새로운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민 참여, 공직자 윤리 강화, 재정투명성 제고 등 열린정부파트너십이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6개 분야에 관한 14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담고 있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의 부정과 부패,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반칙과 특권에 맞선 촛불혁명이

라고 하는 시민운동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제 분야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열린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문재인 정부 이러한 혁신 노력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주제로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상황변화가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의 일부는 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 최종 자체평가보고서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이 제시한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수립된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RM) 권고사항, 공약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간 자체평가보고서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활동과 진전사항을 주로 기술한다.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OGP 주기 전반

정부와 시민사회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공동창조를 경험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12월 임시적으로 OGP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행동계획, 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 IRM 보고서 등 국가 OGP 프로세스에 관한 주요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임시 페이지는 2018년 6월 정부혁신 국민포럼 웹사이트(<http://www.innogov.kr>)에 통합·개편되었다.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OGP 포럼”의 출범은 제3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기간 중에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이다.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3차 국가실행계획 공약담당부처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OGP 포럼”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OGP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과 공동창조에 대한 논의와 이행노력도 본격 추진되었다.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 중 협의

대한민국 OGP 포럼의 출범은 제3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의와 공동창조는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 OGP 활동을 주

도하는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디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공약 발굴은 물론 OGP 활동과 관련된 국내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공개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질적 향상, 전자정부 기술 중립성 및 웹 접근성 보장 등 7개의 공약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실현 가능성, 구체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공약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국제원조 정보 공개, 대국민 ODA 통계 접근성 제고 등이 최종적으로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반영되었다.

국가실행계획 이행 과정 중 협의

2017년 9월 이후 이루어진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과 평가 등의 활동은 주로 대한민국 OGP 포럼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포럼은 거의 매월 가진 포럼 정기회, 워크샵, 임시회 등을 통해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된 공약들의 목표일정 대비 진행경과,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추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점검을 실시하였다. 개별 공약들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약담당자들이 포럼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쟁점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I IRM 권고 사항

OGP는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이라 한다)의 보고서를 통해 각 회원국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IRM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에서, IRM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IRM 권고사항
1. 매우 구체적이고 야심차고 연관성 있는 공약을 포함시킨다.
2. 다음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기간 중 공동창조 과정을 개선한다.
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진전을 위해 OGP 플랫폼을 활용한다.
4. 이해 상충 및 정치자금 문제 해소에 관한 강력한 공약을 수립한다.
5. 기존 열린 정부 정책 및 관행을 현대화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IRM 연구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이행과 후속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적절한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1. 매우 구체적이고 야심차고 연관성 있는 공약의 포함: 진행보고서에서 IRM은 14개의 공약 중 7개 공약의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의도된 변화 또는 결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활동

들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제4차 국가실행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활동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민국 OGP 포럼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약의 발굴과 개발에 집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OGP Support Unit에도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거쳤다. 그러나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약들을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2.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이행 기간 중 공동창조 과정의 개선: 제3차 국가실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인 대한민국 OGP 포럼의 출범을 OGP활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의와 공동창조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OGP 주기에 적합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방향, 방법과 절차, 일정 등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련 회의결과의 공개, 정기적인 정보의 현행화 등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열린 정부와 관련된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수의 정부부처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OGP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문재인 정부의 개혁 진전을 위한 OGP 플랫폼 활용: OGP IRM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OGP 플랫폼의 활용

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2018년 3월 확정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여러 개혁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정책실명제 강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의 과제들을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 반영되었다. 다만, 정부혁신을 위한 추진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OGP에 대한 정부 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에서 과제실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OGP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GP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하면서 정부혁신 과제와 열린정부관련 공약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4. 이해 상충 및 정치자금 문제 해소에 관한 강력한 공약의 수립: IRM 연구원은 이해충돌 관련 법령 시행, 로비 및 정당 자금조달 규제, 기업의 실질적 주주와 지배주주 공개를 위한 공공장부 도입 등을 차기 국가 실행계획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사실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 중의 일부는 공약으로 제안되어 검토된 부분도 존재한다. 다만 이들 사항들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려사항이 있어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는 공약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대한민국 OGP 포럼은 제4차 국가 실행계획에 공약으로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5. 기존 열린정부 정책 및 관행의 현대화: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국 진출을 계기로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열린 정부 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선도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대한

민국 정부는 물론 OGP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고민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8년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는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접근해보자는 취지를 갖는다. 열린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접근과 논의를 통해 향후 열린정부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공공서비스 개선·공공청렴도 향상·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개선 등 6개 영역 14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제3차 국가실행계획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각 공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개 공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공약도 상당 수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	공약	추진현황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완료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완료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완료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완료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완료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완료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완료
3.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완료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상당 수준 완료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완료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4-b로 통합)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완료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완료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완료

①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정보공개 확대 및 일반국민들의 정보에의 접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대상을 사립대학으로 확대한다.

주요 내용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293개 사립(전문) 대학(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까지 확대 시행한다.
- 사립대학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8년 6월 말 현재 전체 사립(전문) 대학 286개교 중 98%에 해당하는 280개 대학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6개 사립대학은 고려대, 농협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이다.
- 사립대학 정보공개 담당자 215명을 대상으로 '16년 9월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학정보공개에 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완료 수준 : 완료

향후 계획

- 신규 지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조사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의 추가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06년 구축된 정보공개포털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건의 문서목록과 500여만 건의 원문문서를 공개하고 60여만 건의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고 있으며 3천여 기관이 연계 되어 있고 연간 이용자가 7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 동안 막대한 정보량에 비해 시스템의 검색기능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 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한다.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한다.

주요 내용

-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공개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등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선호도 투표를 통해 반기별로 국민에게 유용한 Best 10 원문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완료 수준 : 완료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의 보급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 말 현재 49.6%에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표 이행률을 2016년 말까지 55%로 개선한다.

추진현황/성과

- 사전정보공표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2015년 말 80% 수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행률이 2018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1%,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7%로 향상되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말에 이미 55.0%를 달성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가 미흡한 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및 컨설팅이 실시되었다.

완료 수준 : 완료

향후 계획

- 앞으로 사전 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계속 확대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②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36대 분야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정보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하여,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22개 분야는 2016년까지 그리고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등 3개 분야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 아울러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42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개방 노력도 진행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6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33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22개는 당초 2017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조기 개방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 2016년 12월 수립된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국민 수요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회현안 해결형 데이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산업 부문 간 융합 지원을 위한 '융합형 데이터' 등 3개 영역 총 38개 분야의 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 의료영상, 일자리 정보 등 15개 분야의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졌다.

완료 수준 : 완료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제를 도입·적용한다.

주요 내용

-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하여 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강화를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민간 활용이 우수한 21개 DB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 21개 DB에서 2017년 42개 DB로 평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데이터에 대해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이루어진다.
-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도 매년 양성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6년에는 대기오염DB(한국환경공단), 교통사고DB(경찰청) 등 21개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2016년 개방된 22개 국가중점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활용도가 높은 20개 등 총 42개를 대상으로 데이터에 대한 품질수준평가를 완료하였다.
- 2018년에는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 45개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중이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체계(www.gooddata.go.kr)를 도입하였으며 품질평가와 병행하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담당할 전문심사원 양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21명, 2017년 24명, 2018년 28명 총 73명의 전문심사원 양성이 완료되었다.

완료 수준 : 완료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공공데이터의 활용 증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오픈 포맷으로의 전환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

- 공공데이터가 자유롭게 가공·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중 오픈포맷의 비중을 2015년 38.9%에서 2016년 60%, 2017년에는 70%로 확대한다.

추진현황/성과

- PDF 파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PDF 파일데이터 정비와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의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2017년 7월 현재 총 45,155건의 데이터 중 34,004건이 3단계 이상의 오픈포맷으로 개방됨에 따라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율이 75.3%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

성하였다.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도 높은 오픈포맷 비율을 인정받아,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완료 수준 : 완료

2-d. 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유·개방하고 있는 핵심데이터의 경우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될 수 있도록 개방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한다.

주요 내용

- 2016년 30개의 표준 데이터셋을 추가 제정하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을 제정한다.
- 표준데이터 등록 시 표준 준수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추진현황/성과

- 다 기관 공통데이터 등 핵심데이터를 개방표준 분야로 선정·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2017년 8월 현재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등 79개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 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도 개발 완료하였다.(gooddata.go.kr)

완료 수준 : 완료

③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2014년부터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참여 모델인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주요 내용

-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6년도에 중앙 44개, 지방 338개 등 총 382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3,8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회복지, 생활안전,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다양한 디자인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밀접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2017년 8월 현재 중앙 39개, 지자체 234개 등 총 273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우수과제(49개)에 대해서는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서비스디자이너(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용 방법론 제시)를 지원하여 추진하였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등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완료 수준 : 완료

④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Active-X나 특정 브라우저 등 비표준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

-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표적 비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Active-X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 기술로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20년까지 대민 웹사이트의 Active-X를 모두 제거한다.

추진현황/성과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Active-X 제거 실적 등 이행 점검 추진 결과 2016년 12월 Active-X를 사용 중인 대민 홈페이지의 수는 1,296개, 잔존 Active-X의 수는 1,930개, 누적 제거 Active-X의 수는 3,289개로 조사되어 Active-X 제거율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대민 홈페이지 누적 제거 Active-X의 수는 4,152개로 제거율은 79.6%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연차적으로 Active-X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수준진단 및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제거 관련 설명회 개최(2017.3.),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개정(2017.4.), Active-X 제거를 위한 웹 표준 전문가 특별좌담회 개최

(2017.5.),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정책 담당자 워크숍 실시
(2017.8.)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완료 수준 : 상당 수준 완료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행정서비스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 서비스 영역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한다.

주요 내용

- 1차적으로 2016년에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 통합을 추진하며, 2017년 이후 복지포·워크넷 등 타 부처 포털과의 연계를 실시한다.

추진현황/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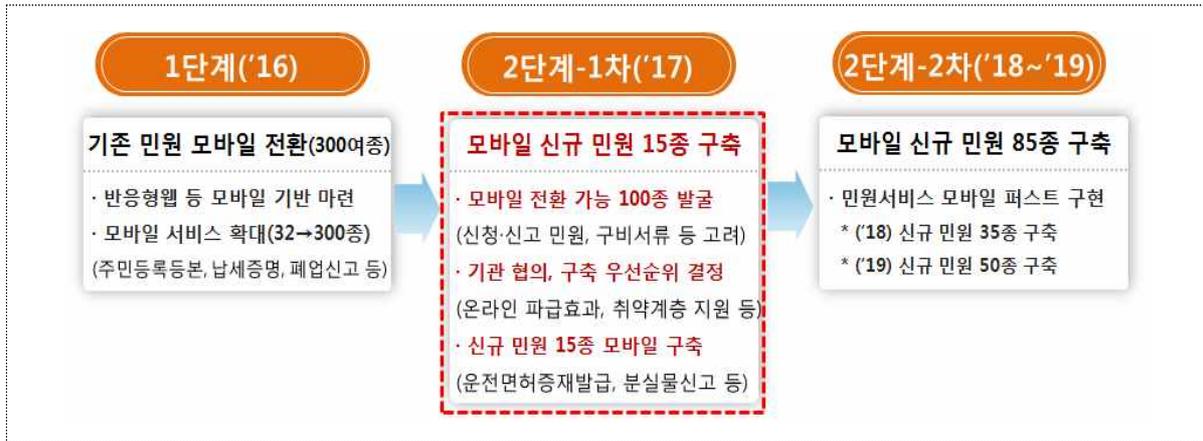
- 2017년 7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러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국민 통합플랫폼인 정부24를 구축 완료하였다.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며, 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료 수준 : 완료

향후 계획

- 기관별로 제공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고, 민원사무의 온라인·모바일 확대를 추진한다. 그리고 2019년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의 282종 행정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연계한다.

※ ('17) 타기관 85종, ('18) 타기관 85종, ('19) 타기관 90종 행정서비스 연계확대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 4-b. 공약에 통합

⑤ 반부패 및 공직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

-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 청렴도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6년 총 2,441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에 대한 설문 실시를 실시하였고 73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측정하였다. 이때 청렴도 조사 설문지에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16. 9월)하였고,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후 각 공공기관에 그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완료 수준 : 완료

⑥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한다.

주요 내용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 우선 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 및 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분야 등 13개 필수 항목의 공개를 2016년 중 실시하고 향후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추진현황/성과

-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6년 8월 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IATI가 선정한 39개 공개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하였다.
- 2차로 2017년 4월 KOICA와 EDCF 외 주요 정부부처(기재부, 외교부, 복지부)의 ODA 사업정보 및 프로젝트 이외의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사업 정보도 공개하였으며, 공개항목도 13개에서 18개로 확대하였다.
- 2018년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49개 ODA 시행기관

이 ODA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모든 ODA 사업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완료 수준 : 완료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부적절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결과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ODA관련 통계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

- ODA 통계모니터링시스템(www.data.odakorea.go.kr)을 개편하여 ODA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ODA 재정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추진현황/성과

- 2017년 4월 ODA통합관리시스템(stats.odakorea.go.kr) 개편을 완료하였다.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및 ODA 통합보고시스템(stats.odakorea.go.kr) 상 “ODA 통계조회”를 연동하여 연도별 대한민국 ODA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ODA의 전반적인 지원현황 등 통계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국가별 매핑 화면 구축 및 주요 통계수치 자동산출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사업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심층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 2018년 6월 현재 2016년 통계까지 공개되고 있다. OECD DAC는

2017년 잠정통계를 2018년 4월 발표한 바 있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완료 수준 : 완료

VI 결론 및 향후 계획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이행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년간 추진된 공약들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상당한 수준의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14개 공약 중 다른 공약으로 통합된 1개를 제외하고, 12개 공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공약도 상당 수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난 3차례의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열린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공약 사항들을 제시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혁적인 공약의 제시와 이행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평가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혁신 추진과 OGP활동 간의 연계를 고려할 것이다.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열린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야심차고 연관성 있는 과제들을 OGP 플랫폼을 통해서도 병행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OGP 주기 전반과 대한민국 OGP 포럼 등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의 확대도 필요하다. 열린 정부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다양한 주체들 간에 논의되고 공유되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좋은 공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실행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참고 공약별 상세 현황

공약 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2017.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박성현
공약 내용	
공공문제	정보공개 서비스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확산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온라인 수수료 납부, 다양한 파일 뷰어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 정보목록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남아있어 국민들의 공공정보의 접근이나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공약 내용	정보공개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아직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286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미사용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 권유 하였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아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증진) 공약이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의 질 향상, 대국민 접근성 확대 또는 정보권 부여에 기여하는가? →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교육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 대국민 접근성 확대하였음 · (시민참여) 공약이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영향력 증대, 시민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 및 개선에 기여하는가? →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개방, 오남용 처리방법 등의 원고작성 및 참여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음 · (정부 책임성) 공약이 공무원의 책임성을 위한 규칙, 규제, 메커니즘 구축 또는 개선에 기여하는가? → 사립대학교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의 중요성, 정보공개 처리요령 등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교류 및 동료학습	교류 및 동료학습 경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실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정보공개 담당자(17.11.27~28. 12.4, 12.12, 총1,500여명) · 내용 : 정보공개 처리절차, 공개 및 비공개사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방법,

	<p>질의 응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행정현장학교 실시(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 '17.9.27. 대학생 등 60여 명) · 내용 : 정부혁신과 정보공개제도 소개 등 			
추가 정보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신규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연계('17.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가이드 설명 및 교육 - 연계 추진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시스템 이용교육 등 ○ 권역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실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정보공개 담당자('17.11.27~28. 12.4, 12.12, 총1,5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정보공개 처리절차, 공개 및 비공개사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방법, 질의 응답 등 ○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원광대·농협대, 공통점은?" 언론보도('17.11.29) ○ 2018년 신규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가이드 설명 및 안내 ('18.2)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포털 사용자(일반국민, 공무원)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공개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공개시스템의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관컨설팅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 사립대학 대상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확산 및 정보공개포털과의 연계		○ 2016. 7. 1.	○ 2017.12.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박성현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전화번호		psh1102@korea.kr / 2100-3427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 정보공개 옴브즈만 운영 등 		
기타 정보				

공약 표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2017.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박성현

공약 내용

공공문제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세계 최초의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정보공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공약 내용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발굴·제공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할 계획이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아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투명성 증진) 공약이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의 질 향상, 대국민 접근성 확대 또는 정보권 부여에 기여하는가?
 → '17년 하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원문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시민참여) 공약이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영향력 증대, 시민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 및 개선에 기여하는가?
 → 전문가 그룹에 선정한 30건의 우수 원문정보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10선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를 유도하였음
 · (정부 책임성) 공약이 공무원의 책임성을 위한 규칙, 규제, 메커니즘 구축 또는 개선에 기여하는가?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개최(17.12.7)

교류 및 동료학습

교류 및 동료학습 경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권역별 정보공개담당자 교육 실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정보공개 담당자('17.11.27~28. 12.4. 12.12. 총1,500여명)
 · 내용 :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개 및 비공개 사례,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방법, 질의 응답 등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행정현장학교 실시(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 9.27. 대학생 등 60여 명)
 · 내용 : 정부혁신과 정보공개제도 소개 등

추가 정보	기타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하반기 원문정보 우수사례 선정 계획 및 결과 - '17년 하반기 원문공개 우수사례 조사(11.26.~12.5.) - 1차 선정(12.15.) 및 인터넷 선호도 조사(12.19~12.26.) - 우수사례10선 선정(12.27.) 및 홍보 ○ 정보공개 컨설팅 실시(시('17.11~12, 30개 지자체 대상) - 사전정보공표 관련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주기적 현행화 등 의견 제시 및 개선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발간·배포('17.8월말)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공개시스템의 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 ○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관컨설팅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 국민체감형 원문정보 조사·선정		○ 2016. 7. 1.	○ 2016. 6. 12.	완료
○ Best Practice 사례 전파 및 홍보		○ 2016. 7. ~	○ 2018. 6. 30.	완료
○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 2016.12. ~	○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박성현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전화번호		jyk0907@korea.kr / 2100-3426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 정보공개 옴브즈만 운영 등 		
기타 정보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사전공개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함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률이 미흡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행률이 49.6%에 불과하였다.

공약 내용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이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49.6%에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이행률을 2016년까지 55%로 개선시킨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이 정책 실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표준모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 표준모델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사전정보공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보다 표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 접근성)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전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시민 참여)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할 때 시민들은 양질의 공공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 (책임성)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적극 공개할 때, 국민은 정부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

교류 및 동료학습

1-a와 동일

추가 정보

2013년에는 사전정보공표 건수가 5만4천건에 불과하였으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전파와 점검 및 평가를 통해 2016년 말에는 186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정보공표 운영실태 점검·컨설팅(2016. 9. 외교부 등 5개 중앙부처, 대전시 등 11개 지자체,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공기관) ○ 사전정보공표 실태 상하반기 점검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개선조치 완료 (25개 기관)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선정 (2017년 1월) ○ 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컨설팅(2017년 11월) 			
향후 계획	<p>앞으로 사전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계속 확대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p>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활용	2016. 7. 1.	2017. 12. 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고준석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jskoh7@korea.kr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1-a와 동일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공약 표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공약 이행 주기 :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 고수요·고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은 국민 수요 반영, 고용, 창업 등 고용 기회 창출 및 경제적 효과 창출 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목표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해 옴. 즉, 사회, 경제, 정치 및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여 관련 분야 문제 해결에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 특히, 2016년에는 국가전자조달정보(조달청)를 조기에 개방하여 정부 투명성을 향상하고, 2017년에는 일자리종합정보(노동부)를 개방하여 구인·구직 관련 체계적 매칭, 고용기업 평가 등을 지원하고, 2018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연내 개방 완료 예정인 '선거종합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데이터셋을 조기에 개방(중앙선거관리위원회코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및 선거일 투표소 정보 등)
- (배경)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 수요, 고용 기회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반영한 고수요·고가치 중심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데이터 중요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잠재가치 등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개방
- (기초자료)
 - 제1차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15~2017)(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4.12)
 - 제2차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17~2019)(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12)
 - 2018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2)

공약 내용

- (목적)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는 조기 개방을 통해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기에 마련
- (공약 내용)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는 2016년에 조기 개방
- (기대 효과) 국가 중점데이터의 조기 개방으로 민간, 국민 등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를 충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민간 주도의 고수요·고가치·대용량 '국가 중점데이터 선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기업, 국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대국민 수요조사, 해외사례 및 신기술 분석 등을 통한 국가중점 데이터 후보 발굴 및 선정
 - (선정 기준)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신산업 창출에 기여,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 국민 생활 편익 및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 등
- (우선 개방 데이터 분야 선정 및 개방 로드맵 수립)
 - (2015년~2017년) 공공행정, 국토관리, 보건복지, 해양수산, 재난안전, 고용노동, 교육, 농업축산, 문화관광, 식품의약, 조달, 특허, 환경 및 기상 등 14개 분야

	<p>총 36개 분야 데이터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2019년) 국민수요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회현안 해결형 데이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형 데이터', 산업·부문 간 융합 지원을 위한 '융합형 데이터' 3개 영역 총 38개 분야 데이터 선정 *2차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계획(총 38개) : '17년(15개) → '18년(17개) → '19년(6개) o (공공기관의 체계적,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품질 진단 및 개선, 개방 DB 구축 개방 DB 표준화, 개방 DB 구축 및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오픈포맷 비중 확대 및 오픈 API 개발 등 병행하여 실행
<p>OGP 가치와의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정보 접근성) 2016년 22개 분야 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함으로써, 2017년까지 총 33개 데이터를 개방하고, 2017년에 15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여 2017년까지 국가 중점데이터가 총 48개로 확대 및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o (시민 참여)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및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 선정 과정에 국민(시민)이 참여하고, 2016년 조기 개방 우선 순위 선정에도 국민 참여 o (정부 책임성)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은 정부가 개방 대상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데이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향상에 기여 o (기술·혁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개방 대상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개선, 개방 DB 구축 및 오픈 API 구축을 통한 데이터 조기 개방을 지원하고, 범정부 통합 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통합 제공 및 관리하여 접근성을 향상
<p>교류 및 동료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OICA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연수 (2016.7,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 외 10개국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및 전략 소개 o Asia Pacific Open Data Summit 2016 (2016.9, Bangk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o International Open Data Conference (2016.10, Madr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세션에서 전 세계 공공데이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소개 - 10여 개국 공공데이터개방 관계자를 패널리스트로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생태계 주제로 세션 주관 o UN Regional Workshop Action Planning in Open Government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in Asia (2016.10, Bangk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아시아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UN SDG 협력 방안 논의 o 3rd OECD OGD Expert Group Meeting (2017.5, Pa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여개 OECD 회원 및 파트너 국가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및 전략 논의 o UN International Knowledge-sharing Workshop on Open Government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6, Ha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전 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UN SDG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정책 관리자 과정 (2017.10~11,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니지 등 10개국 전자정부 정책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및 전략 소개 ○ Korea-ASEAN Republic Cooperation Forum on Public Administration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소개 및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ASEAN 지역 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 ○ 4th OECD OGD Expert Group Meeting (2018.6, Pa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여개 OECD 회원 및 파트너 국가와 공공데이터의 장기적 지속 성과 연속성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등에 대한 논의 ○ WeGO, WB 협력 전자정부/스마트시티 워크숍 (2018.7,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외 13개국 공공행정/IT 정책/서비스 개발 및 제공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및 전략 소개 ○ NIA-IDB 중남미(REDE GEALC) 고위공무원 전자정부 초청 연수 (2018.6,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바하마 등 14개국 전자정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및 전략 소개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 전략 : 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3~2017)(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3.12),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12), 공공데이터 혁신전략(2018.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4),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18.3),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6) 등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015년 개방된 11개 분야를 제외한 데이터는 2017년까지 개방 예정이었으나,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국민의료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를 2016년 조기에 개방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관리정보(국토부), 지방재정정보(행안부), 교육행정정보(교육부), 식의약종합정보(식약처), 법령정보(법제처), 노동보험정보(근로복지공단), 도로명주소정보(행안부), 국가통계통합정보(통계청), 산업재산권(특허청), 재난관리정보(행안부), 음식물쓰레기정보(한국환경공단), 국가공간정보(국토부), 해양공간정보(국립해양조사원), 국민연금정보(국민연금공단),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조달청), 도시계획정보(국토부), 국민의료정보(심평원), 수출입무역통계(관세청),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 사회보장정보(사회보장정보원), 기상정보(기상청), 산업기술정보(산업기술진흥원) ○ (2017년) 제2차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총 38개 분야 데이터 개방 계획 중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 일자리정보 등 15개 분야 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피소정보(행안부), 생태자연도·식생정보(생태원), 일자리종합정보(노동부), 공간융·복합정보(국토부), 전통음식종합정보(식품연구원), 시설물안전관리정보(시설공단), 해양환경·생태정보(해수부),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 국민건강알림예측정보(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복지부), 환경영향평가정보(환경연구원), 			

	<p>HACCP정보(식약처), 인공지능의료영상정보(심평원), 건축물에너지정보(국토부), 공공기관조달정보(조달청),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부산시), 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018년) 제2차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의 나머지 17개 분야 데이터 외 12개 분야 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하여 총 29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모두 개방 완료 예정 cf. 한국은 정책·전략 등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1월(시작)~12월(종료)을 기준으로 함 - (추진 방향) 국정 과제, 사회적 가치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혁신 성장동력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 투명성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5개 영역 29개 분야 데이터 -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재정보(심평원),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ETRI), 자율주행 영상판독DB(자동차부품연구원), 교통신호현시정보(경찰청), 공공시설물 안전 정보(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 관리인증정보(식품안전관리인증원), 침수흔적도 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 정보(도로교통공단), 먹는샘물 수질정보(환경부), 암검진자정보(코호트)(국립암센터), 임상연구정보(질병관리본부), 중소기업 지원현황정보(중소벤처기업부), 선거종합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광고 소비행태 조사정보(KOBACO),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육아정책연구소), 전력사용량 데이터(한국전력), AI기반농업예측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활동지원정보(농림축산식품부), 참조표준데이터(표준과학연구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KOTRA), 부모 금융회사종합정보(예금보험공사),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해양수산부), 환경평가모니터링정보(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원분석정보(권익위원회), 도시재생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푸드뱅크 정보(사회복지협의회) o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 품질 등 국민(시민)의 데이터 수요·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창구인 데이터 1번가를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설 (2017.8)하여, 개인 또는 조직(단체)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 중이며, 요구사항을 분석해 향후 데이터 개방 계획에도 반영 o 민간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창업, 고용 기회 및 경제적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된 국가 중점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신제품 기획 및 생산성 향상 등 다방면으로 데이터가 활용 * 국가 중점데이터 활용 건수(파일데이터) : 908,339건(2018.6 기준) * 국가 중점데이터 활용 건수(오픈 API) : 108,375건(2018.6 기준) 		
향후 계획	<p>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결과, 대국민 수요조사 및 데이터 1번가 등을 통해 데이터 공급과 수요 현황을 분석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포커스하고 이를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또한 국가 중점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활용 우수사례 발굴,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p>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2016.7.1	2018.6.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 시민사회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jp@opennet.or.kr) ○ 민간부문 :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 khj@uos.ac.kr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공약 표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공약 이행 주기 :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를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하고, 공공 부분의 조직이 데이터 개방 후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동시에 공공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공유를 강화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

- (배경)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및 품질 수준이 낮은 데이터 개방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초자료)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2016~2017)(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6.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v1.1(행안부, 2017.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계획(2018)(행안부, 2018.0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행안부, 2018.1)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2016.11)

공약 내용

- (목적)
 - 공공데이터 수집·생성·운영·제공 등 공공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계 확립
 -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축적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관리, 개방 및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 체계 구축
- (공약 내용)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 2016년 21개, 2017년 42개 및 2018년은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 진행
 -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역별·프로세스별 평가항목(36개)을 구성하여 이행수준을 평가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정 조치를 점검하며, 개선 컨설팅 등 지원
- (기대효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민간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품질관리 평가 대상 및 범위 정의)
 -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국가 중점데이터 및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대상으로 평가 시행
 - 기존 개방DB 위주로 시행된 품질관리 평가를 2018년부터는 기관단위로 영역을 확장하여 기관의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 평가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거버넌스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수준평가 심의위원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자문 및 평가 결과 심의 -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교육·선발을 통한 전문심사원 양성, 지원 인력/조직 신설 ○ (품질관리 도구 개발) 품질평가 지표(계획, 구축, 운영 및 활용 부문 9개 평가지표), 품질수준(5등급), 평가대상 데이터 선정 기준 등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운영절차, 평가기준, 시정조치 절차 등에 대한 실행 지침·가이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v1.1(2017.6), v1.0(2016.8)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2018.1), v1.1(2016.6)
<p style="text-align: center;">OGP 가치와의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접근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시민 참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전문심사원은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교육 및 선발을 통한 양성하는 것으로 국민(민간)에게 참여 기회 제공 ○ (정부 책임성)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Chief Open Data Officer)을 임명하고, 공공데이터 책임관의 역할 중 하나로 품질관리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 ○ (기술·혁신)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진단 서비스(http://www.gooddata.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교류 및 동료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 Pacific Open Data Summit 2016 (2016.9, Bangk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 International Open Data Conference (2016.10, Madr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세션에서 전 세계 공공데이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소개 - 10여 개국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패널리스트로 초청하여 공공데이터 생태계 주제로 세션 주관 ○ UN Regional Workshop Action Planning in Open Government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in Asia (2016.10, Bangk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아시아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UN SDG 협력 방안 논의 ○ 3rd OECD OGD Expert Group Meeting (2017.5, Pa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여개 OECD 회원 및 파트너 국가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및 전략 논의 ○ UN International Knowledge-sharing Workshop on Open Government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6, Ha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전 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추진현황 소개 및

	<p>UN SDG 협력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orea-ASEAN Republic Cooperation Forum on Public Administration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소개 및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ASEAN 지역 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 o OECD Joint-Steering Group on Enhanced Access to Data (201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멕시코 등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향상 방안에 대한 경험 교류 및 한국의 데이터 접근성 확보 전략(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포함) 소개 			
<p>추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및 품질관리 관련 예산 : 2016년/2017년 17억원, 2018년 19억원(기재부 예산서 기준) o 기타 관련 정책 및 전략 :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8.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 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4),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6) 등 			
<p>이행수준</p>	<p>미착수</p>	<p>제한적</p>	<p>상당 수준 완료</p>	<p>완료</p>
				<p>○</p>
<p>구체적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015년 개발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국가 중점데이터와 민간 활용이 높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기관차원의 품질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기관 단위로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015년 개방된 11개 국가 중점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활용도 Top 10 데이터에 대한 수준평가 완료 (총 21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데이터) 건축행정정보(국토부), 지자체 인·허가정보(행안부), 국가재정정보(기재부), 실시간 수도정보(수자원공사), 농수축산가격정보(농수산정보원), 수산정보(해수부), 등산로·생물종정보(산림청), 교통사고정보(경찰청), 전국상권정보(소상공진흥공단), 국민건강정보(건강보험공단), 부동산 종합정보(국토부) . (활용도 Top 10) 도로명주소(우정사업본부), 버스정보(서울특별시),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동네예보정보(기상청), 버스정보(국토교통부), 버스정보(경기도), 우편번호정보(우정사업본부), 대기오염정보(한국환경공단), 생활기상지수조회(기상청), 중기예보조회(기상청) - (2017년) 2016년 개방된 22개 국가 중점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활용도 Top 20 데이터에 대한 수준평가 완료 (총 42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데이터)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공약 구체적 활동 내용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도 Top 20) 해외안전여행정보DB(외교부), 동물보호관리정보DB(농림축산식품부), 공공취업정보DB(인사혁신처), 군수품조달정보DB(방위사업청), 실시간어장정보(국립수산과학원), 전국병원·의원정보DB(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상권분석정보DB(서울특별시), 부산시 시내버스운행정보DB(부산광역시), 제주도 유동인구DB(제주특별자치도), 국회전자도서관DB(국회도서관), ICT동향정보메타정보DB(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등급판정정보DB(축산물품질평가원), 			

	<p>항공기운항정보DB(한국공항공사), 공연전시정보DB(한국문화정보원), 물질안전보건정보D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필품가격정보(한국소비자원), 승강기 정보 및 검사이력DB(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업정보DB(한국예탁결제원), 전력통계정보DB(한국전력거래소), 출몰시각정보DB(한국천문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평가 대상기관 설명회 및 실무교육 진행 : 중앙 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유지보수업체 등(총 63개 기관) - (2018년)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총 45개 기관: 부 18개, 처 4개, 청 17개, 위원회 6개)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중이며, 12월까지 평가 완료 예정 cf. 한국은 정책·전략 등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1월(시작)~12월(종료)을 기준으로 함 <p>○ 공공기관의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지원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평가 체계를 도입(수준평가 자체진단 서비스 : http://www.gooddata.go.kr) - 품질평가와 병행하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에 대한 상시교육 프로그램(기본, 실무,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 품질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이행력을 정부혁신 평가 등에 반영 <p>○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교육 및 선발을 통해 전문심사원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법·제도, 정책,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품질관리 매뉴얼, 영역별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등 품질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품질심사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심사원 선발 . 2016년 : 교육수료 29명, 품질심사원 선발 21명 . 2017년 : 교육수료 58명, 품질심사원 선발 24명 . 2018년 : 교육수료 71명, 품질심사원 선발 28명 		
<p>향후 계획</p>	<p>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사용자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참여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하기 위하여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p>		
<p>이행과제 현황</p>	<p>시작일</p>	<p>종료일</p>	<p>이행수준</p>
<p>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p>	<p>2016.7.1</p>	<p>2018.6.30</p>	<p>완료</p>
<p>연락처</p>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 시민사회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jp@opennet.or.kr) ○ 민간부문 :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 khj@uos.ac.kr

2. 공공데이터 개방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소프트웨어(한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포맷 방식으로 데이터 개방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률이 3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약 내용	2015년 기준 38.9%였던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을 2017년에 70%까지 확대하는 등 전체 개방 데이터 중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록할 때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한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며, 신규 개방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등록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 → CSV) 자동 전환도구도 개발하여 제공하며,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을 유도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오픈포맷 개방률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 접근성)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한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여 오픈포맷 형

	태의 데이터 개방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확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본 공약은 국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이슈를 반영한 것이다. ○ (기술과 혁신)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도모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2-a와 동일			
추가 정보	2-a와 동일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 : 2017년에 70%까지 확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3% 달성(2017.7월 말 현재) . 34,004(오픈포맷 데이터(3단계 이상)) / 45,155(총 데이터) = 75.3%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전환 등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F 파일데이터 정비 (2016년) - 2016년 PDF 파일데이터 정비후 PDF 파일은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 개발제공 (2016년 하반기)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 : 지속적으로 오픈포맷 비율 증진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전환 유도 :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등록심사 강화	2016. 7. 1.	2018. 6. 30.	완료	
자동전환 도구 개발	2016. 7. 1.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2-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2. 공공데이터 개방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7. 12. 31.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기관별로 개방한 데이터가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항목과 형식이 제각각으로 제공되어 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정제·가공해야 하는 등 활용을 제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약 내용

2016년 30개의 표준 데이터셋을 추가 제정하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데이터 등록시 표준 준수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 개방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접근성) 각 지역 기관 단위로 생성되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준을 통일하여 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시민 참여) 공공데이터 표준은 공공·민간 의견조회(약3개월) 및 행정예고(약1개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하였다.
- (기술과 혁신) 공공데이터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도구 개발·적용을 통해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이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2-a와 동일

추가 정보

2-a와 동일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2017년 말까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100개 대상 후보 선정
 -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등 79개 표준제정(2017.8월 현재)
-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도구개발(2016년, gooddata.go.kr)

향후 계획

- 2017년 말까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100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표준 후보목록으로 발굴된 44개 데이터를 토대로 21개 이상 표준을 2017년 말까지 제정 . 지진대피소 등 44개 기 발굴 o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개발된 도구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개방표준 제정 (100개 누적)		2016. 7. 1.	2017. 12. 31.	상당 수준 완료
표준데이터 자가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적용		2016. 7. 1.	2017. 12. 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2-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3. 시민 참여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정책과 문광섭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정책제안.공청회.정책토론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적극적 발언을 하는 일부 국민이나 단체, 소수 전문가의 입장만 반영하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 또한 기존의 국민 참여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드러내지 않은 숨은 욕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약 내용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개요>
-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형인 '국민디자인단'을 2014년 도입·추진하였다.
 -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서비스·정책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특징>
- 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경험과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 진정으로 필요(needs)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서비스디자인 관점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 접근(bottom-up)을 강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이해를 심화시킨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의 도출 및 확산을 통해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한다.
- <추진 과정>
- 정책기획·결정·집행단계별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수요자(일반국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과제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8~15명)한다.
 -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국민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디자인적 사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라는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며, 국민 수요를 관찰.분석해서 정책 개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p>1. 발견하기(1단계) : 관찰조사, 체험조사, 심층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하는 단계</p> <p>2. 정의하기(2단계) : 조사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요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방향 및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p> <p>3. 발전하기(3단계) : 아이디어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단계</p> <p>4. 전달하기(4단계) : 서비스 프로토타입 등을 통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점검하는 단계</p> <p>○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p> <p><주요 사례></p> <p>○ (정보공개 개선 사례) 환율, 날씨, 세관 등 해외여행 정보 및 해외직구 정보 등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공공데이터를 국민디자인단의 논의를 통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관세청)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p> <p>○ (노동·복지환경 개선 사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버스를 움직이는 택아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인천시)하여 아동복지와 노동생산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p>								
OGP 가치와의 관련성	<p>○ (시민 참여) 정책과정 전반에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설계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정책 발굴, 개선사항 도출로 정책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및 정책완성도를 제고한다.</p>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p>○ 예산투입 현황 : ('15) 5.2억원 → ('16)5.2억원 → ('17)6.6억원</p> <p>○ 국정과제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세부 실천과제</p>								
이행수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미착수</td> <td style="width: 25%;">제한적</td> <td style="width: 25%;">상당 수준 완료</td> <td style="width: 25%;">완료</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p>○ 우수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디자인단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기반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 국민디자인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제작(국민디자인단의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활동, 구성원별 역할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직관적으로 설명) - 국민디자인단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구축운영 <p>○ 디자인단 운영 단계별 맞춤형 교육·워크숍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발굴) 사업담당자, 서비스디자이너 대상으로 과제 발굴방법 및 디자인단 구성원별 역할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워크숍 실시 - (과제운영)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49개) 서비스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과제 운영절차 안내 및 서비스디자인 심화교육 실시 - (역량강화)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성과 공유 등 성과창출 방안, 장애요인 대응방안, 과제별 추진전략 도출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p>○ 국민디자인단 과제유형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월 현재, 총 273개(중앙 39, 지자체 234) 신규과제 발굴 및 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3개 과제 중 예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및 특교세 대폭 확대(2016년 5억원 → 2017년 10억원)를 통한 성과별 차등 교부(양적성장→질적성장으로 전환) * 2016년 과제발굴 현황 : 총 382개(중앙 44, 지자체 338)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추진 시기를 고려, 단년도 과제와 다년도 과제로 이원화 - 과세 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업과제 도입 * 중앙 간, 중앙.지방 간, 지방 간 과제에 민간기관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관련된 스토리 발굴·실행 및 스토리 공유·확산 등을 수행하는 스토리두어 구성·운영 o 2016년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시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디자인단 유공기관 및 유공(대상)자 포상, 우수사례 공유(전시 및 발표) - (포상규모) 대상 : 대통령상(2), 최우수상 : 국무총리상(4), 우수상 : 행정자치부 장관상(60) - (부상금) 포상 훈격에 따라 차등 지원 - 주요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모델 개발 · 민간협업으로 버섯6차 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 ·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 Let 美 in 산단-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 · 플레이버후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 만들기 ·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 ·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273개) 발굴 추진(중앙 39, 지자체 234) o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발굴, 추진성과 공유 및 성과확산 추진 o 2018년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착기반 강화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2016년 국민디자인과제(382개) 추진	2016. 5. 1.	2016. 11. 30.	완료
2016년 성과공유대회 개최	2016. 12. 2.	2016. 12. 2.	완료
국민디자인단 풀 확대	2016. 7. 1.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문광섭		
담당 부서(과)/ 직책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mksb71@korea.kr/ 02-2100-346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서비스 디자이너, 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아래 관련자를 인터뷰한다면 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성원 PD, 010-3123-3623	
기타 정보			

공약 표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공약 이행 주기 :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자원정책과 김경직 사무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중 상당부분이 Active-X라는 비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사용을 강제하고, 편중과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켜 지속적으로 불편을 초래. 향후 Active-X 이용은 점차 축소시키고 웹 표준(HTML5)으로 전환하여 Active-X가 초래한 보안상 취약점과 불편을 제거

공약 내용

행정·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Active-X를 2020년까지 제거하고 웹표준(HTML5)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시 간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17년 대민홈페이지의 Active-X 1,269개(87.3%), '18년 291개(92.9%), '19년 204개(96.8%), '20년 166개(100%) 제거 추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우선 국민들이 자주사용하고 생활에 밀접한 대민 홈페이지부터 Active-X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지속적으로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Active-X 제거 실태점검을 하고, Active-X 제거등 정부의 웹표준정책 관련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여 '20년까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Active-X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OGP 가치와의 관련성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층 간결하고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 및 정책참여를 보다 쉽게 함.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공약내용 변경>
2017년 7월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사이트기준으로 Active-X를 관리하던 것을 Active-X 수 기준으로 관리
※ 국정과제(8-5 열린혁신정부,서비스하는 행정, **20년까지 Active-X 제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존 (사이트 기준)	1,638개 제거 Active-X Free 달성률 88%	844개 제거 Active-X Free 달성률 95%	-	-	-
변경 (Active-X 수 기준)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 63%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87.3%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2.9%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6.8%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100%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X를 포함한 모든 플러그인으로 제거대상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X를 웹표준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고, Active-X 사용방식과 유사하게 배포 설치가 필요한 실행파일(EXE)로 대체하여 정책효과 저감 -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Active-X, EXE 등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도록 정책목표를 변경(1월) ○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웹사이트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플러그인 유형별 제거방향 예시 등 설명 ※ 1차 설명회(2월), 2차 설명회(4월) ○ 3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률이 높은 30대 웹사이트를 사업대상으로 선정(3.14), 선도사업 관계 기관 워크숍 개최(3.20),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제거방안 도출(5~7월) ○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사용현황 통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웹사이트의 Active-X 제거 실적 조사(4월) - 공공기관 유형별, 플러그인 기능 및 유형별 사용현황 통계 산출(4월) ○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민서비스는 플러그인 설치없이 이용가능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고시(3.21) - 출력보안 플러그인 제거 위한 민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출력제어 플러그인 사용하는 주요 기관 대상 의견수렴 회의 (6.7) ※ 법령 소관부서(행안부 민원서비스정책)과와 민원법 개정안 협의 완료(8월) - 웹DRM 플러그인 관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 웹DRM을 권장하지 않도록 영향평가기관 수행안내서 개정(6월) ※ 개선내용을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대상으로 교육 실시(8.8) -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연구 착수(5.14) - 플러그인 사용하는 주요 기관 대상으로 의견수렴 회의 개최 (6.7) ○ 잔존 액티브X 현황 : 제거율 76% 	
	구분	15.6월

	<table border="1"> <tr> <td>잔존 액티브X 수 (개)</td> <td>9,129 (100%)</td> <td>2,191 (24.00%)</td> </tr> </table>			잔존 액티브X 수 (개)	9,129 (100%)	2,191 (24.00%)
잔존 액티브X 수 (개)	9,129 (100%)	2,191 (24.00%)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완료('18년 12월) ○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18년 10월)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	2016. 7. 1.	2018. 6. 30.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김경직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자원정책과/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gomjik@korea.kr / 02-2100-3971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고승지 사무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각의 기관별로 약 9만여종의 공공서비스를 13천여개의 개별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약 내용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정부24'를 구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중심의 통합플랫폼 '정부24'를 구축한다.
- '16년에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이 되는 3개 시스템 (대한민국정부포털+맞춤형혜택안내+민원24)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 '17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서비스와의 통합연계를 추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 접근성)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다.
○ (기술과 혁신) 시스템 통합 및 주요 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행정안전부내 3개 시스템 통합('17.3 정부포털 + 민원24 + 알려드림e)
○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정부24" 개통('17.7.)
○ 주요 정부서비스 107종 연계완료 ('18.6.)

향후 계획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행정정보서비스 통합포털 구축	2016. 7. 1.	2017. 7. 26.	완료
부문별 서비스 포털과의 통합·연계	2016. 7. 1.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고승지		
담당 부서(과)/ 직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bluesim2@korea.kr / 02-2100-4218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혁신기획과 이효순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그간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이를 다 알 수 없고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약 내용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2016년 중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별 관심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정부 서비스 알리미’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후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소개.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투명성 증진) 대국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 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2017년 7월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러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가 구축되었으며, 관련 앱 또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앱의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이 공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구체적 활동내용

○ 정부3.0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 앱(하이브리드 앱)형태로 구현
○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택 서비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코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방문자수 : 월 평균 24만명, 앱 다운로드 수 : 82만여 건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 식품, 주거, 안전'부터 세금·가계소비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매월 추천 ○ 앱은 정부24로 통합 ○ 웹사이트 내에 OGP 웹 페이지 신설 		
향후 계획	이 공약은 4-b로 통합되었다.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제공	2016. 8. 19.	-	(4-b로 통합)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이효순		
담당 부서(과)/ 직책	혁신기획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eehs30@korea.kr / 02-2100-3418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3. 3.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조사평가과 원현심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부정청탁 근절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차단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청렴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약 내용

-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부정청탁법 제정·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근거 마련 등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 노력을 유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접근성) 청렴도 조사결과를 권익위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 (시민 참여) 청렴도 측정의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을 참여하도록 한다.
- (책임성) 청렴도 설문 내용에 업무담당자의 책임성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 2017. 4. 18.부터 4. 26.까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요르단, 몰도바 등 반부패기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 ※ 2007년 이후 청렴도 측정제도의 해외 전수 실시(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부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

추가 정보

- 공약예산: 2,176백만원('16년), 2,091백만원('17년)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2016. 8월부터 청렴도 조사 설문지에 부정청탁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진행

	<p>※ 설문 내용: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 포함(2016.9월)하였고,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후 각 공공기관에 그 결과의 공개 요청</p>			
향후 계획	<p>-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경험 문항을 반영하여 조사 진행(~2017.11월) ※ 부정청탁 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항 및 외부부패 사례 내부응답 설문에 부정청탁 간접경험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진행 예정</p> <p>- 청렴도 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2017. 12월)</p>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반영		2016. 7월	2017. 12월	완료
청렴도 측정 결과 인터넷 공개		2016. 3월	2018. 6월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원현심		
담당 부서(과)/ 직책		청렴조사평가과/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whs12@korea.kr/044-200-7632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p>각급 공공기관 유관단체</p> <p>※ 기관별 청렴도 측정시 평가자로 참여</p>		
기타 정보				

공약 표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공약 이행 주기 :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국무조정실 / 맹준호 서기관

공약 내용

공공문제

2015년 12월, 한국 정부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고, IATI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정보 공개를 통해 ODA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 추진

공약 내용

IATI가 제시하는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ODA 지원 실적, 사업지역, 국별지원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ODA 사업정보를 자체 웹사이트(www.odakorea.go.kr) 및 IATI(www.aidtransparency.net)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동 공약을 통해 원조사업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공개가 활성화
(시민참여) 정부의 정책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민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정부 책임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공무원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책임성이 보다 명확해짐

교류 및 동료학습

N/A

추가 정보

N/A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대한민국 ODA 시행기관(49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ODA 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모든 ODA 사업정보 공개			
향후 계획	-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원조정보 공개 활동 지속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국제원조정보공개	'16.7월	'18.6월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담당자	맹준호			
담당 부서(과)/ 직책	대외협력과 / 서기관			
이메일/전화번호	maeng@korea.kr / 044-200-21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외교부 개발협력국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본부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기타 정보				

공약 표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공약 이행 주기 :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 정현이 전문위원

공약 내용

공공문제

ODA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 상세한 설명과 유형별·분야별·지역별 지원내역 등에 대해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통계정보가 제공되도록 ODA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여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ODA 통계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

공약 내용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ODA 통계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ODA 통계모니터링시스템(www.stats.odakorea.go.kr)을 개편하여 ODA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ODA 재정의 투명성 증진 도모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ODA 통계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업의 상세정보 및 분야별, 국가별, 기관별, 개별 사업별 집행결과 등 다양한 통계가 공개됨으로써 ODA 재정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

(시민참여)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기 쉽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추출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정부 책임성) ODA 사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ODA 정책 결정에 책임성을 갖도록 함

교류 및 동료학습

N/A

추가 정보

N/A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p>. ODA통합관리시스템 개편 완료('17.4월 新시스템 공개)</p> <p>-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및 ODA통합보고 시스템 (stats.odakorea.go.kr)상 'ODA통계조회'를 연동하여, 연도별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 공개 중 ⇒ 국민들이 우리나라 ODA의 전반적인 지원 현황 등 통계정보를 조회·다운이 가능함</p> <p>* ODA통합보고시스템상 ODA모니터링시스템은 ODA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의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대내적 관리용 시스템으로, 추진 예정 또는 진행중인 사업 정보 등 ODA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포함하므로, 대국민 공개가 어려움.</p> <p>- 국가별 맵핑화면 구축 및 주요 통계수치 자동산출 기능 추가, 사업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심층분석 추가 등</p> <p>. '18.6월 현재 '16년 통계까지 공개 완료</p> <p>- '18.4월 '17년 잠정통계 발표(OECD DAC)</p> <p>. 시행기관 대상 新ODA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3회('17.2월, '17.5월, '18.2월) 개최</p>			
향후 계획	<p>ODA 모니터링시스템에 각 시행기관의 사업정보의 충실한 입력을 통해 더욱 정확한 ODA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시스템을 통한 ODA의 정보의 지속적 공개 추진</p> <p>- '18년말 '17년 ODA 확정통계 통계시스템 공개 예정</p>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16.12월	"18.6월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담당자		정현이		
담당 부서(과)/ 직책		개발협력지원과/전문위원		
이메일/전화번호		hyunyi@koreaexim.go.kr/044-200-2159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외교부 / 개발협력국,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협력국 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작업반(WP-STAT)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N/A		